Online Series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조 한 범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03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재스민혁명의 공통점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최근 재스민혁명의 공통된 특징은 거의 모두가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기간의 연구와 방대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던 공산권연구는 사회주의체제 불변론에 매몰되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체제붕괴 예측에 실패했다. 많은 중동학자들은 이슬람체제의 특수성에 집착한 나머지 재스민혁명의 가능성을 도외시 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상당부분 구사회주의국가들과 중동의 체제내구력에 대한 편협된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권력체제의 안정성 및 외교안보적 능력과 체제의 내구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체제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한 '사회내의 균열'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련, 동구체제의 마지막 시기에는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진보가 장기간 정체되었으며, 주민들은 궁핍화된 일상생활을 강요당했다. 서방세계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동경 속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주민들은 체제경쟁의 패배와 계획경제체제의 실패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였다. 이는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내적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근본적 위험요인이었다. 체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작은 계기도 급격한 체제변화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 등에서 체제변화를 이끈 계기들은 사소하거나 우발적인 사건들

이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주민들의 반응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소련과 동구 주민들의 내적 신념체계 속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권위를 상실했다. 그러나 많은 서방의 학자들은 소련과 동구의 군사력과 권력체제의 안정성 등 외형적인 정치·안보 요인에 주목했고, 결과적으로 소련,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야기한 '사회내의 균열'을 포착하는데 실패했다.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과 중동의 국제정치적 맥락에 주목한 많은 논의들 역시 재스민혁명의 가능성을 진단하지 못했다. 재스민혁명에 성공했거나 진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재체제에서 고물가, 고실업, 그리고 확산된 부패에 장기간 시달려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권층의 부패와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만성적 고실업 상태에서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장기독재체제를 강요당해왔다. 재스민혁명의 촉발요인은 생존권을 위협받은 한 노점 청년의 분신이라는 우발적 사건이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큰 호소력으로 작용했고, 중동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재스민혁명이 발발한 국가들의 주민들에게 기존 체제에 대한 내적 신뢰가 이미 오래전에 철회되어있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외형상의 안정성 이면에 사회내의 균열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분석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성과 중동국가의 권력구조 안정성 및 국제정치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던 반면, 사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 안정성에 대한 평가 경향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와 새로운 북한 권력구조가 주목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석도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정착과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유일지배체제를 장기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권력승계 여부는 북한체제의 안정성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및 이로 인한 정세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체제의 급변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체제의 충격은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으며, 체제의 내구력 및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장기간 준비되어온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권력교체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은 조문정치 및 유훈통치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집권 및 체제안정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 작업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권력체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차이점은 김정일 위원장이 수십 년에 걸친 후계자 수업 및 등극 과정을 경유했음에 비해 김정은의 경우 단기적인 속성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는 후계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두 사

례 모두에서 '확실한 후견인'인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유사성을 지닌다. 왕조적 권력구조에 익숙한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가계 이외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존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권력체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내적 균열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북한사회내의 균열'에 주목하여 분석할 경우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에 이미 북한은 장기간 경제난에 시달려 왔다.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까지 추산되는 아사자는 북한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장기간 성장을 멈추고 있으며, 사실상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경제위기 속에서 정경유착형 부유층의 형성과 빈부격차 및 계층적 위화감이 확대되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확산과 아울러 생계형 경제활동 등에 대한 뇌물수수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로 북한 국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있으며, 아사위기의 일상화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언제라도 절망적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점에서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후유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급확대 방안이 결여된 화폐개혁은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으며,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못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당계획재정부장의 신속한 숙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 배급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출구였다.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좌절과 아울러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사회변동은 절대적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보다는 기대가 좌절되는 국면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데이비스(James C. Davis)의 이론에 입각할 경우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식경제체제의 붕괴상황에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제적 개입은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후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과거와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탈북자의 증가와 생계형 월경의 일반화 등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이완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는 200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국내입국자의 수가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탈북 유형도 육상 및 해상, 기획탈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국내입국자와 비교가 불가능한 규모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2011년 현재 중국 내 탈북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에 산재해 있는 탈북주민의 방대한 규모를 추산해 볼 수 있다. 최근 단속강

화로 탈북규모의 증가세가 완만해졌으나 북한 내 위기가 진행되는 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식량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현상과 아울러 탈북주민의 지속적 증가는 북한사회의 근본적 위기를 반영하는 징표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결속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념적 중심이 부재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후계자수업 및 권력기반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유훈통치라는 명목으로 김일성 주석의 정치적 권위를 활용했다. 김일성 주석체제에서 이루어진 북한체제형성 및 초기 경제건설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 중 겪었던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북한체제 최대의 위기와 대규모 아사의 경험과 더불어 약속했던 강성대국의 징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카리스마의 일상화' 과정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 중 시작된 체제비판은 김정은 체제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스민혁명에서 효과가 입증된 통신기술의 발달도 북한상황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오라스콤 텔레콤'은 보고서를 통해 2011년 9월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80만 명을 넘고 있으며, 2011년 말까지 100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북·중무역의 활성화 및 생계형 국경월경의 일반화와 아울러 북한 내 휴대전화는 외부정보의 유입 및 북한 내 정보의 유통에 있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 낼 것이며, 결국 북한당국의 정보통제를 무력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사소한 사건 및 정보도 순식간에 북한 전역으로 확산될 지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위기 전망

김일성 주석 출생 100년 및 강성대국선언 등 대형 국내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2012년은 심각한 위기의 해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사회내의 균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12년 북한위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의 경제난과 궁핍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은 그 동안 정치적 상징성이 큰 2012년을 암묵적인 '희망의 해'로 제시, 인내와 노력을 강요해왔다.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제시라는 긍정적 기능과 아울러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폭발적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정치행사를 위해 배급체제의 정상화 및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나 이를 위한 자원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대북지원의 축소 및 대남무력도발에 기인한 남북교류의 중단 등은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자원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2012년은 북한에게 위기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인내를 강요당했던 북한의 민심은 '약속의 해 2012년'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폭발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생력을 상실한 북한경제의 위기완화를 위한 핵심적 키워드는 한국이며, 대북지원 재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북한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안정적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 경제위기의 완화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2012년의 대내 행사를 축제분위기속에서 진행하고 식량난을 완화해야하는 북한에 있어서 대남관계 개선과 이로 인한 자원의 확보는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군부가 김정은 권력승계 안정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군부의 불만을 무릅쓰고 천안함·연평도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문제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 및 대남강경파의 입지는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이며, 김정은이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2012년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2년에도 북한 내 경제상황이 근본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식량난에 기인한 민중봉기 등 위기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며, 강경파의 득세에 따라 심각한 유혈사태도 예상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은 실권을 장악한 후견세력에 의해 일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기 보다는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집단적인 이해관계 보존을 위해 김정은이라는 상징적 구심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실각한다고 해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배후그룹이 전면에 등장하기 보다는 김정남, 김평일 혹은 김경희 등 김일성 가계의 인물을 형식적으로 옹립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기의 심화는 권력투쟁과 아울러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도발과 대화를 병행해왔으며, 특히 최근 체제위기 심화과정에서 협상카드로 도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서해교전→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지도부가 무력도발 모험주의라는 극단적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우발적 형태를 가장한 군사분계선 인근의 육상도발 및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형태의 테러 등 보다 자극적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의 극대화라는 압박을 가하고 한국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시적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소련, 동유럽과 최근 재스민혁명을 경험한 국가들은 권력체제의 상대적 안정성 및 대외적인 외교안보적 능력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집권체제의 붕괴를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아울러 두 경우 모두 장기적 경제위기로 인한 궁핍화 및 실업 등으로 사회적 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작은' 계기들이 체제변동을 유발하는 촉발요인들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2012년 북한 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내적 균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